

NEWS 내년 의대정원 3058명... 증원 이전 규모로 회귀

2025년 4월 18일 금요일

전남지역 병상 불균형 해소 도, 6개 중진료권 나눠 관리

전남도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병상자원 배지로 지역 의료체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한 제3기(2023~2027) 병상수급 관리계획을 오는 29일까지 행정예고하고 5월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22개 시군을 목포권, 여수권, 순천권, 나주권, 해남권, 영광권 등 6개 진료권별로 분류하고, 최근 5년간 병상공급량, 인구 추계, 재원일수, 병상이용률, 유출입자수 등을 기초로 2027년까지 지역별·병상 유형별 공급 및 수요량을 분석했다.

이들 바탕으로 6개 중진료권을 공급제한, 공급 조정, 공급 가능 지역으로 구분하고 병상 공급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의료기관 신규 개설 및 변경 허가 절차도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1면 '분산 에너지'서 계속

광주시는 지역 안공기능 기업과 에너지 기업 간의 협업을 통해 ICT 기반의 에너지 자립 모델을 실현하고, 분산에너지 기반의 전력 신산업 테스트베드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방침이다.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으로 지정되면 에너지 생산, 저장, 소비, 거래 등 전 주기적 신사업에 대한 규제 특례가 적용되고, 망이용 요금과 기후환경 비용 등 전기요금 부대비용에 대한 인센티브도 제공된다. 이에 따라 전력 다소비 기업의 지방 이전을 촉진하고, 국가 전력망 확충 부담을 줄이며, 탄소중립 정책 실현을 앞당기는 효과도 기대된다.

전남도 역시 지난 15일 산업부에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신청을 완료했다. 해남, 영암, 나주, 여수 등 4개 지역을 대상으로, 전력다소비 기업 유치와 에너지 자립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전략을 제시했다.

이들 지역에는 공동적으로 ICT 기반 통합발전시스템(VPP)이 구축돼, 분산자원을 하나의 발전소처럼 운영하는 모델이 실현된다. 도는 이러한 전략을 바탕으로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을 첨단 전력산업 유치의 핵심 거점으로 키울 계획이다.

강상구 전남도 에너지산업국장장은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은 지역의 재생에너지 자원을 활용해 첨단산업을 유치하고, 에너지 안보와 경제자립을 동시에 실현할 전략적 기회다”며 “분산에너지 선도지역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사업을 확대해 나간겠다”고 말했다.

2000명 증가 1년만 원점 5월말 의대별 인원 공표 정부 “정상화 위해 결단” 학사 유연화 조치 없을것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이 증원 이전 규모인 3058명으로 확정됐다.

지난해 의대 정원을 5058명으로 2000명 늘린 지 1년여 만에 다시 증원 전인 2024학년도 정원과 같은 수준으로 되돌아간 것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6학년도 의과대학 모집인원 조정 방향’ 브리핑에서 내년 의대 모집인원을 확정·발표했다.

의대가 있는 40개 대학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 양오봉·이해우 공동회장과 의대 학장 단체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대협회) 이종태 이사장이 함께했다.

이번 발표는 지난달 7일 정부가 의대교육 정상화를 위해 의대생들이 3월 내 전원 복귀할 경우 내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전인 3058명으로 되돌리겠다고 밝힌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지난달 말에서 이번 달 초 사이 사실상 의대생 전원이 등록·복학 신청을 완료했

다. 다만 일부 의대에선 학생들이 ‘등록 후 투쟁’ 방침을 밝히며 수업 거부에 나서 실질 복귀율은 40%에 불과한 평균 25.9%에 그쳤다.

교육부는 학생들의 수업 참여율이 예과는 22%, 본과는 29% 수준이라고 밝혔다. 유급 대상자를 포함해 재학생 1만 9760여명을 대상으로 취합한 통계다.

학년별 수업 참여율은 본과 4학년이 35.7%로 가장 높았다. 지역별로는 서울 소재 의대 40%, 지방대 22% 정도였다. 참여율 50%가 넘는 의대는 4곳에 불과했다.

교육부는 “의총협은 1년 이상 지속된 의정갈등으로 인한 의대교육의 어려움을 타개하고, 수업 복귀 및 의대교육 정상화를 반드시 실현하기 위해 2026학년도에

한해 각 대학이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전인 2024학년도 입학정원으로 확정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이번 결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의총협 일각에선 전원 복귀가 지켜지지 않았으니 3058명은 안 된다는 소수 의견도 있었지만, 전남 열린 긴급회의에서 의대생 수업 참여 유도를 통한 의대교육 정상화를 위해 3058명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는 데 상당수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의대협회 역시 수업에 참여하는 의대생 뿐만 아니라 아직 망설이는 의대생의 수업 참여 계기를 마련하고, 조속한 의대교육 정상화를 위해 내년 의대 모집인원 조정을 확정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이 부총리는 “대학의 교육을 책임지는 의총협과 의대협회의 건의를 무겁게 받아 들여 총장과 학장님들의 의사를 존중해 수용하기로 결정했다”며 “모집인원 조정을 통해 2026학년도 대학 입시의 불확실성을 조속히 해소하고 대학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의대교육 정상화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 의대 모집인원 조정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에도 나선다.

다만 정부와 의학교육계는 올해는 작년 같은 학사유연화는 없으며 수업 불참 시엔 유급을 적용하는 등 학칙에 따라 엄정하게 학사를 운영할 것임을 거듭 강조했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여수석유화학산업 위기대응 공동대책위원회 간담회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17일 전남도 동부지역본부에서 여수석유화학산업 위기대응 여수산단 산별노조 공동대책위원회 위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지역경제 위기극복을 위한 현실적 대책과 국가차원의 위기대응 대책 마련 및 21대 대통령 선거공약 반영을 위한 논의를 하고 있다.

제주항공 특별법 통과... 피해자 생활 등 지원

참사 발생 110일만...의료지원금 지급 등 가능 15세 미만 아동·청소년 희생자 보상 규정 포함

지난해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피해자를 지원하는 법안이 17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피해 지원 및 희생자 추모를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을 제석 의원 290명 중 290명의 찬성으로 가결했다.

특별법은 지난해 여객기 참사 피해자에게 생활·의료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골자다.

15세 미만 희생자도 시민안전보험금

수준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현행 상법은 만 15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사망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했는데, 특별법이 이같은 사각지대를 고려해 보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피해자 외에도 구조·복구·치료·수습·조사·자원봉사 및 취재 등에 참여한 사람도 심리상담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의사 소견서가 있으면 법 시행 후 3년 이내 1년 동안 ‘치유 휴식’을 신청할 수 있다.

미취학 아동을 포함한 희생자 자녀는 대

학교 4학년까지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

유가족협의회가 희생자 추모, 유가족 활동, 항공 안전사고 재발방지 등을 위해 설립할 예정인 사단법인의 운영비를 지원 하는 내용도 특별법에 담겼다.

국가 등이 추모 공원 조성과 추모기념관 건립 등 추모사업을 시행하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됐다.

또 영업활동 제한으로 피해 입은 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피해자 신체적·정신적 건강 상태에 대한 장기 추적 연구 시행 근거 마련 등이 특별법에 포함됐다.

특별법은 조만간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공포되고, 공포 후 2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GGM 주주단 “노조, 중재안 즉각 수용을”

“지역사회 발전·청년 일자리 창출에 악영향 우려”

광주글로벌모터스(GGM) 주주단은 지난 15일 주주단 회의를 갖고 GGM 노조가 광주노사민정협의회 조정·중재특별위원회 중재안을 거부한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노조의 즉각적인 수용을 강력히 촉구했다.

주주단은 “노조만이 중재안을 거부하고 있는 현 상황은 GGM의 경영 정상화는 물론 지역사회 발전과 청년 일자리 창출에도 중대한 악영향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GGM은 일반 민간기업이 아닌 사회적 합의와 공공적 가치를 기반으로

설립된 상생형 기업”이라며 “노사상생발 전협정서 없이 설립 자체가 불가능 했으며, 이를 이행하는 것은 단순한 경영 문제가 아닌 사회적 신뢰를 유지하기 위한 중대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또 “GGM은 지역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고 질 높은 일자리를 제공해 온 기업으로, 갈등 장기화는 결국 청년 일자리 축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지금 이 순간에도 묵묵히 일하는 다수 노동자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노조는 보다 책임 있는 자세로 중재안 수용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장승기 기자 sky@

차: (유) 차오름피앤디
CHAORUM Planning & Development Co., Ltd.

농어촌지역개발 타당성 분석, 예비계획, 기본계획, 지역역량강화
측량업 공공측량, 도로 및 지하시설물 전산화, 드론측량, GIS
지하수관련 지하수영향조사, 지하수이용개발시공
시설물안전진단 교량 및 터널
종합디자인 브랜드 및 캐릭터 개발, 리플렛·포장패키지·스토리북·사진집·조감도 제작
엔지니어링사업 토목설계(도로 및 공항·상하수도·토질 및 지질·구조), 도시계획(단지계획·지구단위계획), 감리

A1 전라남도 영암군 영암읍 군청로 3, 2층
A2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연선로 91번길 44, 3층 301호
Tel. 062-710-5758 Fax. 062-710-5759
E-mail. corpd@naver.com